

이낙연 '광주 군공항 이전' 실타래 푸나

“전남도민 실용적으로 생각해야”...지자체간 적극적 타협 필요성 강조 대구군공항 사례 들며 “경제적 이익·손해 균형 판단하면 포용적일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이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전남이 이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광주MBC '김낙연의 시사분석' 사전 녹화에 출연해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 전남도민들께 부탁을 드리지만 어느 것이 이익일까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공항이 오면 소음이 간간이 있다. 그런데 소음이 안 들릴 만한 곳에 두면 될 것 아니겠나”며 지자체간 적극적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방부의 적극성을 주문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남지사로서 있을 때부터 (군공항 문제) 대처해 왔지만 아쉽게 생각한 게 국방부의 적극성이었다. 광주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은 무엇이 지역 이익에 더 유리할지 실용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과 주민, 지역 정치권이 ‘군공항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인 2018년 1월 광주를 방문해 (사)광주전남인문포럼이 주관한 합동인터뷰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전남 지자체 지도자나 주

민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애정어린 쓴소리를 했다.

이 총리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 수원, 광주공항 세 곳이 문제로 돼 있고 한쪽만 예외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전) 결정하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진척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공항과 함께 옮겨가는 대구 민공항의 사례를 들며 “정부 지원책과 그 뒤에 올 경제적인 이익·손해를 균형있게 판단하면 군공항에 대해 포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열린 대화나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난항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서삼석 전



남도당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명이 지난 18일 광주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돌고리를 찾으려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군공항을 전남이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전남 의과대학 유치나 방사선과가속기, 한국공항공사 전남 우선 배정 등을 얻는 게 이익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봉우 기자



의장석 오른 헌정사상 첫 女부의장

“여기까지 오는데 73년 걸려...감개무량”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장석에 올랐다.

이날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오른 김상희 부의장은 사회에 앞서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73년이 걸렸다”고 운을 뗐다.

김 부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오늘로 국회 그림이 달라졌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그동안 제대로 대표되지 못

했던 인구의 절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징적인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국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명실상부한 대의 민주주의의 요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김태흠 질문 때 여야 고함·야유...추미애 “여자는 쓰면 안되나”

김 의원과 질답...아들·윤석열·박원순 말끝 마다 '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 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대 국회 대정부질문 첫 시작부터 야당과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첫 질문자인 김태흠 의원이 아들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 '수명자' (受命者·법을 명령을 받는 사람) 등을 언급하자 불쾌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맞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까지 나서 고성

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장관은 평소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다”며 “당 대표 때도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침묵하느냐”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박 시장 지지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장관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건들지 말라’고 세계 말하

던데 2차 가해자들한테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의 질문에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의원이 이 사건의 진의와 제 아들을 관련시키는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그때는 24년 전으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관례적으로 늘 지휘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없이 따랐던 검찰총장이었다.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불가피하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유출 의혹을 받는 법무부 입장문 초안의 수명자 용어에 대해 “낯설지 않은 법률 용어고, 사전과 법전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장관 발언 자료에 수명자라는 용어가 없다”고 재차 묻자 “그래서 아저러는 거냐”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법무부 초안을) 내가 전달했다면 2시간 뒤에야 (글이) 날라질리가 없다. 2시간 사이에 내 글은 이미 수만개가 퍼져나간다.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뭘 알고 얘기를 해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김 의원이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오죽하면 탄핵 소추를 했겠냐”고 하자, 추 장관은 “야당의 권력남용 아니냐”고 반박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후 김 의원이 “수명자라는 표현은 주로 군사법원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군법무관 출신인 최 의원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야당에서 저에게 반격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난 명령·지휘와 같은 말을 즐겨 쓴다”며 “김 의원의 말은 최 의원은 남자가 수명자를 쓸 수 있고 여자는 수명자를 쓰면 안된다고 한다. 박 시장의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 하면서 내 아들의 신상문제까지 결부시켜 질문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촉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인구 분산의 효과가 입증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주장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1’ 때 이전기 관에 대한 기계적인 배분으로 인해 이전기관 수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시즌2’에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차등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인구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남은 17개 광역단체에서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도내 22개 시군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수행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질적 균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완성은 문제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관에 대한 기계적인 배분으로 인해 이전기관 수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시즌2’에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차등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